직업계고 생태계를 살려야 광주가 산다

교육의창

윤영백
광주여상고 교사

오늘부터 직업계고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모집인원을 채우려고 초비상이다. 평소 교과 지도와 담임만으로도 버겁게 살아가는 직업계고 교사들은 2학기엔 영업사원으로도 산다. 학생을 배정받는 인문계고와 달리 학생 모집의 몫이 단위 학교로 던져진 탓이다.

낯선 교무실에 들어서는 일, 보험 판매 직원을 보는 듯한 시선을 견디는 일은 늘 힘들다. 고입 예비생들의 진학 기본값은 '인문계'이다. 직업계고는 인문계고 갈 성적이 안 되는 학생의 선택지 정도로 여기는 데다 직업계고에 대한 정보 부족, 편견까지 쌓인 터라 정보를 채우고 편견을 비워야 선택지의 마지막 자리라도 오를 수 있다.

기본값을 바꾸려고 허우적거린다. 학생 취향을 좇아 학과를 열었다 닫거나 당장의 성과를 위해 교육의 기본을 허무는 악순환이 벌어지기도 한다. 아동은 갈수록 주는데 직업계고를 만든 뜻조차 흐려져 직업계고 생태계는 점점 황폐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직업계고는 아직 OECD 평균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친다. 고졸 인재만으로 충분한 정부 기관, 기업, 각종 산업현장이 수두룩한데 너도나도 일단 인문계로 흐른다. 이런 구조가 굳으면 일하는 젊은이가 텅 비고 막대한 비용이 대학 간판을 위해 누수되며, 고졸은 열악한 조건을 감당하는 싸구려 인력으로 각인된다. 이런 사회가 건강할 리 없다.

지난 7일 교육부 취업통계조사에 의하면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 6만3005명 중 1만6588명이 취업했다. 4명 중 1명꼴. 유지취업률은 66%였는데, 취업자 34%가 1년도 안 되어 그만 두었다는 말이다. 직업계고 진학률은 해마다 치솟고 있다. 특히 광주는 전국 2위로 53.8%에 이른다. '이제 대학진학도 직업계고에서!'라고 홍보하는 지경이다.

기회를 평등(equality)하게 주는 것만으로 사회가 건강해지기 힘들 때, 공평한 결과(equity)를 보장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직업계고 생태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최고의 정책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광주는 가장 모범적인 조례를 만든 곳이다.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에 의하면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0 이상' 고졸자를 '우선' 고용해야 한다. 고졸자를 차별하지 않는 수준(equality)을 넘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지역 사회에 정착하도록 '우선' 보장(equity)하겠다는 것이다.

시청 1층에는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가 있다. 2022년 10월 5일 열었는데, 강기정 시장도 참석한 가운데 청사진을 발표했다. 고졸 인재를 양성해서 좋은 일자리와 이어주고, 그들이 광주에 정착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

수도권 명문대에 보낸 학생 숫자로 지역을 뽐내겠다는 엉터리 발상보다 고졸 인재를 교육하고 일자리까지 보장해서 지역을 살리겠다는 비전이 훨씬 건강하고 현실적이다.

하지만 조례도 사업도 모두 구호에 머물고 있다. 올해 광주 직업계고의 관외 취업은 64.7%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인재는 많은데, 광주에 일자리는 없다는 뜻. 상업계 특성화고인 우리 학교만 보더라도 국가직 공무원을 비롯 국민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굴지의 공기업이나 금감원,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비좁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는 학생만 매년 40명을 넘지만, 최근 5년 동안 광주시 산하 공기업이나 출자기관에 취업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다. 게다가 관내 취업으로 통계 잡힌 학생들도 광주에서 뽑힌 것이 아니라, 국가공기업의 광주 지사로 발령받은 경우다.

지난 3년간 광주광역시 산하 공기업 등에서 총 470명을 채용했는데, 고졸 채용 기관은 19개 중 3개에 불과했고 채용 인원은 단 21명이다. 이마저 경비, 청소, 조리 등 특정 직군으로 치우쳤다. 또한 20세 이상을 채용하거나 대학 과목을 요구하거나 대졸만 취득가능한 자격증을 필수로 거는 경우가 많다. 형평(equity)은 커녕 고졸 지원이 애초 불가능하여 기회의 평등(equality)마저 무너진 상태. 조례는 집행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학벌주의로 조롱당하고 있다.

최근 시의회와 시청 담당자들을 면담하였는데, 조례를 '정치적 수사' 쯤으로 여기거나 역차별로 생각하는 눈치다. '블라인드 하자면서 고졸을 어찌 우선 채용하냐'고도 했는데, 평등과 형평을 대립적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는 기술적 문제에 불과하다.

전국 공기업들은 이미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 왔으며, 승진할 때도 고졸 사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마음만 있다면, 광주가 당장 배우기만 하면 된다. 물론,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생태계를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지자체조차 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바꾸겠는가?

주사위가 던져졌다면 이제 말을 움직이면 된다. 조례는 이미 던져졌다. 직업계고 생태계를 살려야 광주가 산다.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
PC와 모바일에서 만나 보세요
www.jnilbo.com
m.jnilbo.com
facebook.com/jnilbo
구독문의 (062) 510-0471
광고문의 (062) 512-0100

서석대

북한군 '용병' 논란

'용병'(傭兵)은 돈을 받고 싸우는 사람을 말한다. 인류 역사에서 '매춘'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직업으로 꼽힌다. 기원전 13세기 이집트의 람세스 2세는 1만여 명의 용병을 고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대 그리스나 페르시아 왕들도 전쟁에 용병을 활용했다는 기록들이 나온다.

현대 이후 용병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프랑스 외인부대'다. 전 세계 약 140개국 출신 8500여명으로 이뤄진 프랑스 육군 소속인 이들은 1831년 국왕 필립 6세가 식민지인 알제리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 창설됐다. 이 부대는 만 17~40세 남성 중 시험을 통과하면 국적, 인종, 언어능력을 따지지 않고 채용해 입대 경쟁이 치열하다. 선발·훈련 과정이 힘들어 지원자의 90%가 탈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인부대에 들어가 의무 복무기간 5년을 마치면 프랑스 국적을 딸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1863년 4월 30일 멕시코에서 벌어진 카메론 전투는 프랑스 외인부대를 '전설'로 만들었다. 금화를 수송하던 프랑스 외인부대원 60여명이 멕시코 정규군 2000명에 맞서 작은 농장에 진지를 구축해 10시간을 버텼다. 멕시코 지휘관의 항복 권유에 "외인부대에게 항복이란 있을 수 없다"며 끝까지 항전하다 상당수가 전사했다. 부대는 이 전투를 기리기 위해 매년 4월 30일 퍼레이드를 벌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에 대해 '용병'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정권 유지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외화 획득과 국제적 고립 탈피를 위해 군사활동을 펼쳐왔다. 내전을 벌인 앙골라, 콩고, 에티오피아에 무기뿐만 아니라 훈련 지원을 제공한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엔 러시아와 중동 지역의 북한 노동자들이 PMC(민간군사회사)와 연결돼 보안 및 무력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번 러시아 파병은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북한군 파병은 전 세계의 전쟁 중단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고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에너지와 곡물 공급망에 차질을 초래해 글로벌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북한은 파병을 중단해 '돈을 받고' 용병을 보내 세계 평화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박성원 편집국장

社 說

전남 통합대학 의대 신설, 정부가 답할때

전남도, '국립의대' 추천서 제출

전남도가 지난 22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추천서를 정식 제출했다. 추천서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추천 글과 통합의대 신설을 위한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합의 과정 등이 담겼다.

두 대학이 공동 작성한 통합의대 기본 계획서에는 대학 설립 취지와 교육 방향, 의대 규모 등이 반영됐다. 전남도의 정부 추천에 따라 목포대와 순천대는 전남 통합대 국립의대 명의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오는 29일까지 예비인증을 신청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교육부에는 대학 통합 신청서를 각각 제출할 예정이다. 거점 국립대인 국립 목포대와 국립 순천대가 그동안의 갈등을 접고 대학 간 통합을 통한 '통합대학교 국립 의대 추진'이라는 대승적 합의를 이뤄낸 지 일주일 만이다. 국립의대 설립이 속도를 내면서 '30년 숙원' 해결에 성큼 다가서는 분위기다. 올해 3월, 정부에서 대통령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 추진'을 발표하며서 전남 의대 설립의 길이 열렸다.

현재 의대 정원은 거점 국립대 의대와 비슷한 200명 규모다. 전남도는 통합대학으로 의대 개교를 추진한다는 게 목표이며, 양 캠퍼스 모두 의대 관련 교육을 운영하고 동부와 서부 두 곳에 병원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의대 신설이 확정되더라도 통합대학의 본부를 어디로 가져갈 지, 의대 캠퍼스 운영 방식을 두고도 대학은 물론 지역 간 합의도 과제로 남았다. 의대 유치를 전제로 대학 간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각 캠퍼스에 의대를 두는 것 역시 전례가 없다. 정부가 전남도와 두 대학의 결정을 어디까지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의료계와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정부로서는 전남 의대신설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전남도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전남에 의대신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유일한 길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180만 전남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달려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 필요한 미세먼지 저감

광주 내달부터 5등급 차량 제한

광주시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를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키로 했다. 공기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폐해는 걱정과 불안을 넘어 재앙이 됐다. 단속 일변도의 강경책도 필요하지만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계절관리기간 단속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단속은 광주지역 주요 도로 9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실시하며 적발차량은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영업용,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등은 제외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광주와 부산 등 6개 특·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12월부터 다음 해 봄까지 한반도는 매년 고농도 미세먼지에 신음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월과 3월 한반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36㎍/㎥ 이상으로 나쁜 날이 각각 7일과 9일로 집계됐다. 기온이 높아지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된 것이 원인이다.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국발 미세먼지와 차량배출가스, 산업과 석탄발전소 등의 영향도 크다. 광주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26㎍/㎥에서 지난해 17㎍/㎥으로 35% 이상 줄었다는 광주시의 측정치도 복합적인 미세먼지의 오염원을 감안하면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

미세먼지는 담배 이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광주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함께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엔진 교체 등 지원을 확대해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도 크다. 무엇보다 오염원을 정확히 분석하고, 배출 비중이 높은 석탄 산업 등의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물처럼 인간에게 꼭 필요한 공기마저 마음대로 마실 수 없다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www.jnilbo.com
m.jnilbo.com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